

지역개발연구 제37권 제1호, 2005년 6월, pp.35-57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남해안 발전*

— FDI 유입에 의한 인적자본의 형성을 중심으로 —

고 석 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외자에 의존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투자의 이행 기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의 형성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며, 해외직접투자가 유치지역의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문헌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년층 인적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따라서 FDI 유치와 관련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자본의 유형에 따라 부문별, 수준별 인적자본의 수급계획과 이에 대한 조기 시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인적자본, 해외직접투자

I. 서 론

지난 2003년 10월 전남의 광양만 지역이 경남 하동군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전남 남해안 지역의 경제발전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실 여수, 순천 및 광양을 중심으로 한 전남 남해안 지역이 지역개발의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기회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역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여수 해양 엑스포의 유치 등과 같이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할 당시 광역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하동군을 포함한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곤 하였으나, 그 후 별다른 사업 시행의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 이 논문은 2005. 4. 15-16 양일간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여수대학교, 남해안포럼이 공동 주최한 '남해안 발전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Tel: 055-751-5743. E-mail: snko@gsnu.ac.kr

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보강,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김해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물류교역, 첨단산업 및 관광레저의 허브지역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규모는 2,691만평이며, 기본 인프라의 구축 및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3조7,400백억원으로, 이중 부지 매각 등 자체 조달 분 5조6,46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조1천억원은 국고(43.5%), 지자체(27.9%), 민·외자(28.6%) 등에 의하여 조달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자유구역 개발에 있어서 지표면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비에 국한되는 것으로, 지상 구조물의 건설이나 자유구역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비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며, 그들 중 대부분은 외자에 의하여 조달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03. 10).

예를 들어, 국제업무빌딩, 주거·상가·레저시설 등과 같은 지상 건물의 건축에 약 5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14조원은 외자에 의하여 조달하며, 광양항 3단계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2011년 경 외국인 투자규모를 약 120억 달러(약 12조원)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있어서 주요 지상건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구역의 완성 후 사업에 필요한 투자의 상당 부분을 해외자본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헌을 통해서 볼 때,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이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MacDougall(1960)은 일반적인 후생측면에서 FDI의 확산효과(spillover effects)를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Corden(1967), Caves(1971) 등은 FDI가 최적관세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FDI의 산업형태에 관하여 각각 연구하였다. 이들의 FDI에 관한 연구의 공통된 목적은 FDI의 유입에 따른 다양한 비용과 편익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그 후 확산효과를 중심으로 FDI의 효과에 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최근 연구의 일반적인 결론은 FDI의 유입과 확산효과 간에는 밀접한 양의 관계가 있으며, 그 정도는 확산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유입국 경제의 수용능력, 즉 기술수준과 인적자본의 형성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Kokko, 1994, 1996). 이에 대하여 Balasubramanyam(1998)는 'FDI는 부유한 국가에 보다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FDI의 유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쟁과 노동자의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의 관점에서 FDI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FDI 정책과, 기존에 유입된 FDI의 관리정책 그리고 FDI의 확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정책을 FDI 유입국의 인적자본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제 2장에서는 FDI의 유입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FDI 정책, 다국적 기업(MNC 또는 TNC)과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지역의 인적자본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제 3장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지역경제 현황을 산업 및 사회·인구학적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는 한편, 지금까지 제시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방향 및 개발 내용을 검토한 후, 끝으로 제 4장에서는 전남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인적자본의 형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FDI와 인적자본

1. FDI와 경제발전

최근 많은 국가들, 특히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들은 FDI의 유입이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판단하고 FDI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기술발전, 노동력의 질적 향상, 자본의 확보 등과 같은 FDI의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가 소득 불균등, 환경 악화, 과실 송금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1990년대 말 아시아 거의 전역을 강타한 IMF 위기 시에도 태국의 FDI 유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며,¹⁾ 그로 인하여 생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외국기업과 현지기업간에 장기적 기술이전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Yussof and Ismail, 2002).

지난 1970년까지만 해도 경제성장에 관한 분석은 노동, 자본 및 기타 생산요소의 축적에 의하여 설명되는 신고전학과 성장모형에 근거를 두어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고전학과 경제성장이론의 특징은 경제가 장기적으로 정상상태에 수렴하게 되며, 이때 1인당 소득은 저축, 투자, 감가상각 및 인구성장률 등에 의하여

1) 1986-1990 사이 태국의 연평균 FDI 유입 증가율은 72.1%에 달하였으며, IMF 위기 시기였던 1998-1999년 사이에도 26.3%의 증가율을 보였다(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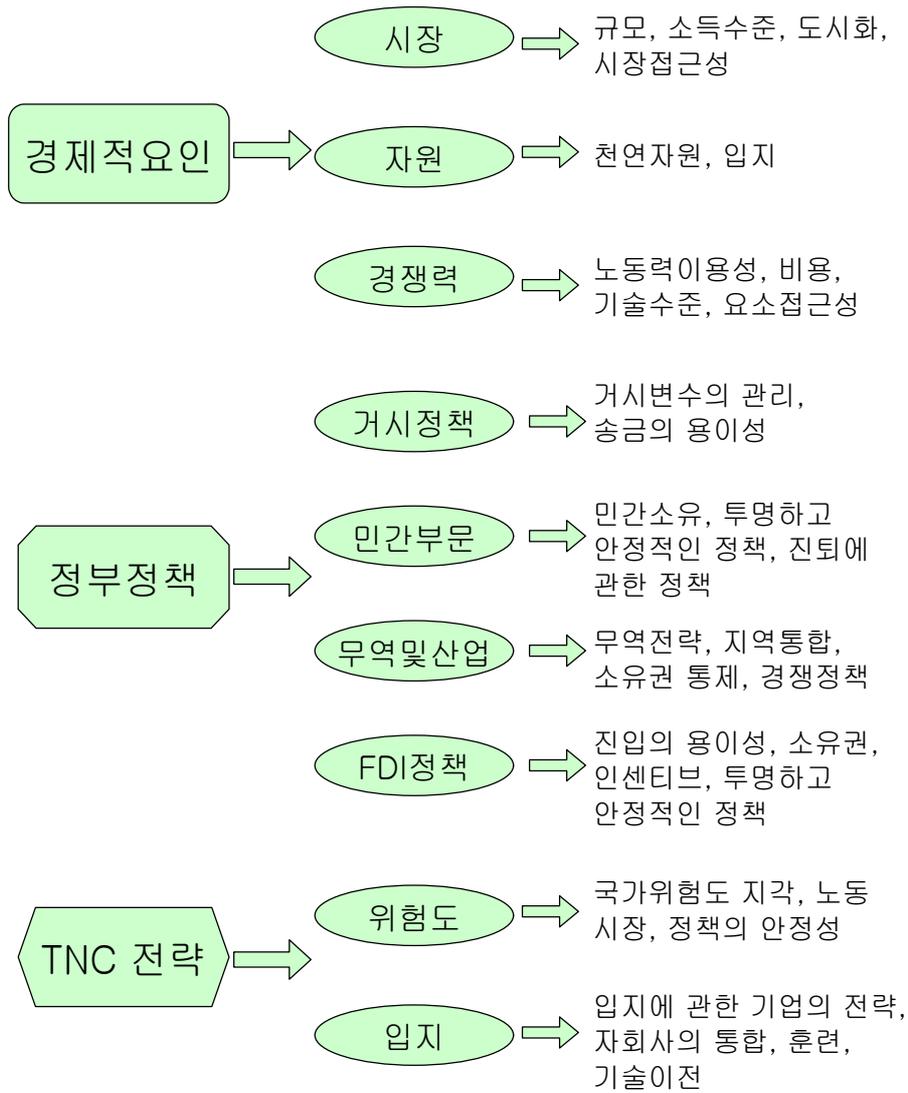
결정되지만 지속적인 소득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 경제성장에 있어서 기술진보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지식의 창조야말로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진보는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해외 기술을 채택할 수도 있다. 특히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비하여 기존의 기술을 채택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선진국 경제에 비하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선진국 경제에 수렴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은 해당 국가의 인적자본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와 관련하여 Van den Berg(2001)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기존의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국가경제의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노동력의 질, 축적된 경험과 인적자본 및 교육시스템이다’라고 하였다. 요컨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적자본의 형성이야말로 해외기술을 흡수 또는 채택하고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FDI 유입의 결정요인

UNCTAD(2000: pp.19-20)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FDI의 유입을 결정짓는 요인을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 정부의 정책 그리고 다국적 기업(MNCs)의 전략 등 3가지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그림 1>은 각각의 범주 내에서 FDI의 유입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범주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요인은 다시 시장, 자연자원, 경쟁력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노동력의 이용 가능성, 노동 비용, 노동자의 숙련도, 관리 및 기술 수준 등과 같은 유입국의 경쟁력 정도가 인적자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FDI의 유입과 유입국의 경쟁력 간에는 양방향의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즉, FDI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입국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한편, 동시에 유입국 경제의 경쟁력 정도에 따라 FDI의 유입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FDI의 유입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또 하나의 범주는 유입국 정부의 정책으로서 여기에는 거시경제정책, 민영화 정책, 무역 및 산업정책 그리고 FDI와 직접 관계되는 FDI 정책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인 정책 단계에서는 각 정책 간에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FDI의 유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FDI 정책에는 유



출처 : UNCTAD(2000), p.19

<그림 1> FDI의 결정요인.

입의 용이성, 소유권의 인정, 투입요소에 대한 접근성,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책 등이 해당된다.

FDI의 유입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세 번째 범주는 FDI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다국적기업들의 FDI에 대한 의사결정 전략이다. 여기에는 MNC들이 인지하

고 있는 투자 대상국의 국가신용도, 정치 및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투자 대상국의 위험도와 입지, 공급원의 선택, 기술이전 등에 대한 전략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MNC들이 해외 입지(투자 대상국 또는 지역)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지만,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Dunning의 OLI 준칙(Dunning's OLI paradigm) (Dunning, 1993)을 활용하고 있다(Te Velde, 2001). 즉, 이는 탁월한 기술력과 같은 소유권 상의 이점(O: Ownership advantage), 숙련 노동력의 이용 가능성과 같은 입지 상의 이점(L: Locational advantage) 그리고 대상 국가의 기업에 특허를 주는 대신 MNC가 기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I: Internalize operation)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협의의 FDI 결정요인, 즉 새로운 FDI의 유입에 관한 결정요인에 국한되는 것이며, 보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FDI의 결정요인은 기존의 해외투자자들을 관리하는 한편, 국내 관련기업들과 MNC들 간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R&D 투자, 교육 및 훈련, 공급측면의 관리 등을 강화시키는 일도 전체적으로 FDI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Te Velde, 2001).

3. FDI와 인적자본 형성

앞의 서론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 FDI와 인적자본의 형성 간에는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즉, 1) 인적자본의 형성은 종종 FDI에 의한 장기적 편익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2) 인적자본은 FDI를 견인하는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고, 3) 인적자본은 현지 산업에 FDI의 확산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FDI의 유입국 입장에서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어떠한 FDI 정책이 가능할 것인가?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1) 어떻게 하면 인적자본 형성에 보다 큰 도움이 되는 MNC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새로운 FDI 견인)? 2) 기존에 입지한 MNC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떠한 유인책이 있을 수 있는가(기존 FDI의 관리)? 3)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스톡의 증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MNC들로부터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국내 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 등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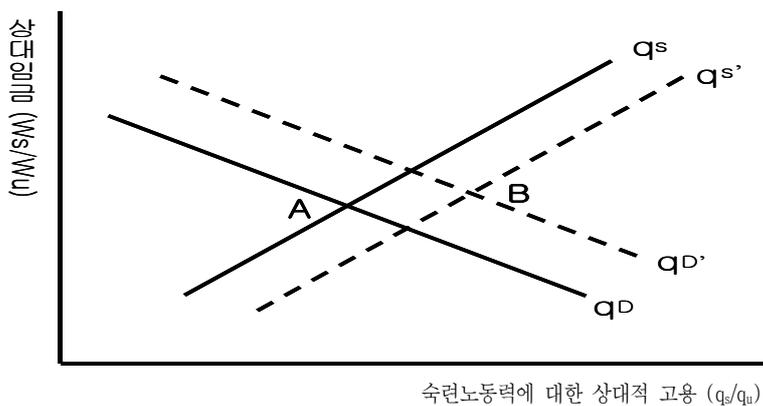
첫 번째 질문인 어떻게 하면 인적자본 형성에 보다 큰 도움이 되는 MNC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FDI 유입국의 입장에서 특별히 인적자본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특정 유형의 MNC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유입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함께 강력한 홍보에 의하여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인 기존에 입지한 MNC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떠한 유인책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UNCTAD(2000)는 유입국의 FDI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MNC들이 자신의 기술과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도는 유입국 정부의 정책, MNC들의 전략, 국내 요소시장과 제도 그리고 MNC들의 유형 간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지막 질문인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스톡의 증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MNC들로부터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MNC들과 국내 기업들 간에 양적, 질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MNC들로부터 지속적인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정보, 기술, 금융, 조달, 입지, 관리, 가격결정, 기타 등의 하청관계를 통한 8가지의 상이한 후방연계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Lall, 1980).

이상에서 논의한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FDI 유치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을 다음 <그림 2>의 도표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Machin, 1996). 다시 말하여,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FDI 유입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그림에서 굵은 선으로 나타난 수요 및 공급곡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수요 및 공급곡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가?인 것이다. 그림에서 횡축은 미숙련 노동력에 대한 숙련 노동력의 상대적 고용비율을 나타내며(q_s/q_u), 종축은 미숙련 노동력의 임금(w_u)에 대한 숙련 노동력의 임금(w_s)인 상대적 임금(w_s/w_u)을 나타낸다. 여



<그림 2> 상대적 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기에서 q_S 와 q_U 는 숙련 노동력의 공용과 미숙련 노동력이 고용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q^D 와 q^S 는 미숙련 노동력에 대한 숙련 노동력의 상대적 수요와 공급을 각각 나타낸다.

끝으로 MNC들의 속성과 유형에 따라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한 FDI 유입국의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측면에서 MNC들이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1) 규모의 기업경영, 2) 복합효과 및 3) 숙련도 편향 기술변화효과 등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Te Velde, 2001). 첫째, MNC들은 규모의 기업경영(scale of opera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의 크기는 MNC들이 현지 고용을 대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완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MNC들이 새로운 상품을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에는 FDI 유입국의 고용을 확대시킬 것이다.

둘째, 복합효과는 MNC들이 국내 기업들이 고용하는 노동력에 비하여 좀더 숙련된 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MNC들이 FDI 유입국에서 이용하는 기술이 비록 본국의 평균 숙련도보다는 낮지만, 유입국의 숙련도보다 높은 경우로서, 선진국에서 개도국 내지 저개발국으로 진출한 의복 및 조립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MNC들이 주로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입지함으로써 숙련도 편향 기술 변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MNC들이 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하여 FDI 유입국의 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보다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다.

한편, 숙련노동력의 공급측면에서도 역시 MNC들은 FDI 유입국의 인적자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1) 일반 교육, 2) 공식적인 훈련 및 3) 비공식적인 직무교육 등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인 교육은 MNC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수준의 대상자들에게 교부금(grants)이나 보조금(assistance)을 지원하는 것이며, 주로 수출산업에서 관찰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교육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종종 외부 사람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둘째, 기업 특유의 훈련 및 일반적인 직업교육으로서 이는 앞의 일반적 교육보다 더 흔히 관찰되고 있다. 이는 다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FDI의 동기에 따라 자연자원 채굴 기업 형태, 효율성 추구 기업 형태 그리고 시장 추구 기업 형태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셋째, 비공식적인 직무훈련으로서, 이는 MNC들이 보다 숙련 집약적일 경우 이 교육을 제공한다.

Ⅲ. 전남지역경제의 현황

1. 전남지역경제의 개요

1) 지역경제 성장

임현준(2004)은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성장 잠재력 분석’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비관적인 수준에 와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청장년층 인구의 역외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우수한 인적자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의 둔화를 초래한 또 하나의 주 원인은 기존의 주력산업인 음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등과 같은 산업들의 성장 추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장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주·전남지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198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1986년에서 1990년 사이 연평균 9.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1991-1995년 사이에는 7.9%, 1996-2000년 사이에는 3.4% 그리고 2001-2003년 사이에는 전국 평균 5%에도 미치지 못하는 3.1% 수준에 머물렀다. 각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의 기여도를 보면, 노동의 경우 지난 1980년대 후반에는 0.5% 정도였으나, 1990년대 전반기에 0.2%로 급락하였으며, 2000년대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0.1% 수준에 머물고 이다. 한편 자본의 경우, 1980년

<표 1> 광주·전남지역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			
		1986~90	1991~95	1996~2000	2001~2003
노	동	0.5	0.2	0.1	0.1
		(5.3)	(2.5)	(2.9)	(3.2)
자	본	7.5	5.9	2.3	2.7
		(78.9)	(74.7)	(67.6)	(87.1)
총요소생산성		1.6	1.8	1.0	0.3
		(16.8)	(22.8)	(29.4)	(9.7)
잠재성장률		9.5	7.9	3.4	3.1
		(100.0)	(100.0)	(100.0)	(100.0)

주: () 안은 기여율을 나타냄.
 자료: 임현준(2004)에서 재인용.

대 후반에는 7.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 와서 2.3%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00년대 전반기에는 약간 증가하여 2.7%를 보이고 있다.

2) 인적자원

(1) 총인구

2003년 현재 광주·전남의 총 인구는 약 3,344천명으로 전국 총 인구 47,849천명의 약 7%를 점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에 의하면 1980년 이후 전국의 인구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의 인구는 감소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이 발표된 기간(1998년에 확정)에는 이 지역의 인구가 다소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광주·전남의 인구 변화

(단위: 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전 국	37,436,315	40,448,486	43,419,899	44,608,726	46,130,101	47,849,227
(A)		(1.6)	(1.5)	(0.5)	(0.7)	(1.2)
광주			1,139,003	1,257,636	1,352,797	1,428,587
전남	3,779,736	3,748,428	2,507,439	2,066,842	1,996,456	1,880,505
광주·전남	3,779,736	3,748,428	3,646,442	3,324,478	3,349,253	3,344,113
(B)		(-0.17)	(-0.54)	(-1.8)	(0.15)	(-0.03)
(B/A)	10.1	9.3	8.4	7.5	7.3	7.0

주: () 안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광주시는 1986년 11월 1일 전남으로부터 분리되어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2) 인구 유출입

광주·전남지역의 인구 전출입은 지난 1995년 이후 2003년까지 매년 최저 111천명에서 최고 160천명에 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인구이동이 있어왔다(표 3). 앞의 총인구변화의 추이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었겠지만, 광주·전남지역의 인구 이동에 있어서 지난 1995년 이후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출이 전입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1998년 이후 순유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의 순유출은 인구의 순유입이 양(+)이었던 1998년에도 14천명에 달하였으며, 1995년 이후 2003년까지 최저 24천명에서 30천명에 달하는 청년

총 인구가 매년 역외로 빠져나갔다.

<표 3> 광주·전남지역 인구 유출입 추이

(단위: 천명)

		'95	'96	'97	'98	'99	'00	'01	'02	'03
전 연령	전 입	114	116	119	127	138	118	117	108	114
	전 출	138	136	133	123	159	151	154	150	160
	순유출	23	19	14	-4	21	34	37	42	46
15~29세	전 입	42	42	42	44	44	37	38	38	36
	전 출	72	69	66	57	68	63	64	66	65
	순유출	30	27	27	14	24	26	27	28	29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KOSIS).

(3) 재학생 수

2000년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총 재학생 수는 약 806천명으로 전국 재학생 수 10,887천명의 약 7.4%를 점하고 있다(표 4). 이와 같은 광주·전남지역의 재학생 수의 비율은 지난 1980년도 11.5%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는 전국 재학생 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감소율에 있어서는 전국에 비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재학생 수는 지난 1990년대에 연평균 3%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광주지역의 재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으나, 전남지역의 재학생 수가 급속히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표 4> 전남의 재학생 수 변화

(단위: 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전 국(A)	10,291,017	11,186,376	11,020,111	10,549,821	10,887,484
		(1.7)	(-0.3)	(-0.9)	(-0.6)
광 주	-	-	357,953	358,555	373,771
전 남	1,185,051	1,185,160	652,138	479,015	432,061
광주·전남(B)	1,185,051	1,185,160	1,010,091	837,570	805,832
		(na)	(-3.0)	(-3.4)	(-0.8)
비율(B/A)	11.5	10.6	10.1	7.9	7.4

주: () 안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4) 교육과정별 졸업생 수

2000년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정규교육과정 졸업자 수는 약 1,860천명으로, 광주·전남 인구 중 55.5%가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와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 59.0%에 비하여 3.5% 포인트 낮은 것이다. 지난 1980년도 이후 광주·전남지역 정규교육과정 졸업자의 비율 추이를 보면 1980년 40.4%로 전국 평균 47.1%에 비하여 6.7% 포인트 낮았으나, 그 후 점진적으로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좁혀져 왔다.

광주·전남지역의 정규교육과정 졸업자 수를 학력 수준별로 보면, 2000년 현재 초등학교 졸업이 22%, 중학교 졸업이 14%, 고등학교 졸업이 40%, 초전문대 졸업이 9% 그리고 대학교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학력 수준별 졸업자 비율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의 정규교육과정 졸업자들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광주·전남지역의 정규 교육과정 졸업자 수 추이

(단위: 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	인구(A)	37,436,315	40,448,486	43,419,899	44,608,726	46,130,101
	졸업자 수(B)	17,632,940	20,167,007	24,151,014	26,439,565	27,232,550
	초등	0.39	0.28	0.21	0.17	0.15
	중학	0.25	0.24	0.20	0.16	0.14
	고등	0.27	0.36	0.44	0.46	0.45
	초전문대	0.02	0.03	0.03	0.05	0.10
	대학 이상	0.07	0.09	0.12	0.17	0.17
	B/A	47.1	49.8	55.6	59.3	59.0
광주·전남	인구(C)	3,779,736	3,748,428	3,646,442	3,324,478	3,349,253
	졸업자 수(D)	1,529,328	1,645,753	1,878,489	1,883,845	1,859,680
	초등	0.52	0.40	0.30	0.25	0.22
	중학	0.22	0.23	0.21	0.16	0.14
	고등	0.20	0.28	0.38	0.41	0.40
	초전문대	0.02	0.03	0.03	0.04	0.09
	대학 이상	0.04	0.05	0.09	0.14	0.15
	D/C	40.4	43.9	51.5	56.7	55.5

자료: 통계청, 총인구(행정구역별, 교육정도별), 각 연도.

2) 산업경제

(1) 산업구조

다음 <표 6>은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지역별 산업구조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3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건설업(11.1%), 농림어업(10.1%), 도·소매업(9.2%), 부동산서비스업(7.6%), 금융·보험업(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광주·전남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및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반대로 부가가치가 낮은 농림어업의 비중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과 비교할 때, 음식숙박업은 높고 부동산서비스업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전남지역의 산업구조를 산업체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자 비율이 1980년 68%에서 2000년 43%로 25%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분야의 취업자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지역별 산업구조

(단위: %)

	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농림어업	1.3	3.4	6.2	10.1	8.0
광업	0.1	0.1	0.2	0.2	0.2
제조업	29.7	45.9	38.3	33.1	37.1
전기·가스·수도업	1.9	3.8	5.0	5.4	6.2
건설업	8.2	8.5	10.8	11.1	10.7
도·소매업	10.9	9.4	9.0	9.2	8.8
음식·숙박업	2.1	2.1	2.6	3.9	2.5
운수·창고업	5.0	5.5	3.6	4.7	3.1
통신업	3.2	2.2	2.5	2.3	2.2
금융·보험	11.9	6.0	6.7	7.4	6.7
부동산사업서비스업	18.8	8.3	9.6	7.6	9.5
사회개인서비스업	6.9	4.6	5.4	5.0	4.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2002).

도·소매업, 제조업, 운수업 분야의 취업자 비율은 1990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어업 종사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유난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에서의 어업분야 취업자 비율은 1995년 3.7%, 2000년 4.1% 수준으로 0.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국 대비 어업 취업자 비율을 보면 20%를 훨씬 넘으면서 1995년 26%에서 2000년 조사에서는 29%로 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홈페이지: 총사업체실태조사).

(2) 외국인 직접투자

2003년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누계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4,609백만 달러, 건수 기준으로 270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의 규모와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전국의 5.1%, 건수로는 1.0%에 해당한다.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997년까지의 총 누계가 1,342백만 달러였으나 그 다음해인 1998년과 2000년에 각각 1,332백만, 1,336백만 달러가 유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지 않았다.

<표 7> 광주·전남지역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누계
광주·전남(A)	1,342 (30)	1,332 (18)	34 (21)	1,336 (44)	273 (31)	202 (59)	92 (67)	4,609 (270)
전국(B)	24,644 (10,290)	8,853 (1,401)	15,542 (2,105)	15,217 (4,140)	11,292 (3,340)	9,101 (2,402)	6,467 (2,561)	91,117 (26,239)
A/B	5.4 (0.3)	15.0 (0.3)	0.2 (1.0)	8.8 (1.1)	2.4 (0.9)	2.2 (2.5)	1.4 (2.6)	5.1 (1.0)

주: () 안은 건수를 나타냄.
 자료: 임현준(2004)에서 재인용.

(3) 연구개발 및 인프라 현황

다음 <표 8>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및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전국을 100으로 할 때, 광주·전남지역의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연구기관 등 공공성을 띤 연구기관의 입지 비율은 각각 8.3%, 8.9%로 연구개발비 2.0%, 연구인력 3.3%, 그리고 기업연구기관 2.3% 등에 비하여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8> 지역별 연구개발 투자 및 인프라 구축 현황

(단위: %)

	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연구 개발비	62.7	9.4	6.5	2.0	15.5
연구 인력	58.6	10.3	6.4	3.3	13.3
공공연구기관	44.5	11.5	8.9	8.3	14.0
대학연구기관	33.0	13.7	14.0	8.9	14.0
기업연구기관	69.3	9.6	5.3	2.3	8.5

주: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계임.

자료: 과학기술부, 『2001년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2. 임현준(2004)에서 재인용.

(4) 공업단지 현황

2004년 6월을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의 공업단지 현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7개, 지방산업단지 14개, 농공단지 36개 등 총 5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이들 산업단지에 2,74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표 10). 단지 내 고용은 86,403명이며, 2004년 2/4분기 누적 생산과 수출은 각각 257,452억원과 8,306백만 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9).

광주·전남지역의 공업단지는 다른 지역의 공업단지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조성된 전체 공업단지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적다는 점이다. 즉, 대전·충남이 100개, 대구·경북이 82개, 부산·경남이 80개 그리고 수도권이 67개인데 비하여 광주·전남지역의 공업단지 수는 57개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보다는 농공단지에 있어서 광주·전남지역의 공업단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둘째, 광주·전남지역의 공업단지,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어 향후 대규모 기업의 유치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지금까지 공업단지 분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저조한 상태에 놓여 왔다(국가산업단지의 경우 8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음).

셋째,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업체의 규모에²⁾ 비하여 고용규모가 상대적

2) 업체 당 분양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이 25.8천m², 수도권이 2.2천m², 부산·경남이 14.5천m² 그리고 전국 평균이 9.3천m²임(본문 <표 9>에서 산출).

<표 9> 광주·전남지역 공업단지 현황 (2004. 6)

	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전국
단지 수	6	9	3	3	7	35
입주업체 수	14,417	3,311	728	236	600	19,556
조성면적	46,703	109,833	60,151	23,678	142,056	414,126
국가산단 분양면적	27,900	67,882	30,430	8,061	51,720	195,579
고용	254,745	212,436	83,814	7,246	32,771	601,374
생산	223,377	565,524	268,732	17,313	195,856	1,286,834
수출	6,238	26,370	17,141	531	6,334	57,402
단지 수	60	17	24	26	14	176
입주업체 수	2,766	1,674	3,321	725	1,374	11,109
조성면적	24,747	26,866	42,501	31,669	37,751	210,395
지방산단 분양면적	10,074	10,442	21,794	16,579	13,957	95,908
고용	72,873	50,704	106,331	42,401	39,763	374,826
생산	76,112	68,438	112,919	62,337	52,380	488,368
수출	1,581	1,229	2,471	7,137	1,731	18,914
단지 수	1	54	55	71	36	319
입주업체 수	4	787	873	715	770	4,599
조성면적	117	7,200	9,148	9,805	6,561	46,160
농공단지 분양면적	96	5,605	6,963	7,696	5,222	36,440
고용	327	22,373	21,687	20,435	13,869	112,162
생산	1,209	23,244	22,036	22,101	9,216	111,234
수출	9	375	550	485	241	2,474
단지 수	67	80	82	100	57	530
입주업체 수	17,187	5,772	4,992	1,676	2,744	35,264
조성면적	71,567	143,844	11,800	65,152	186,368	670,681
계 분양면적	38,070	83,929	59,187	32,336	70,899	327,927
고용	327,945	285,513	212,834	70,082	86,403	1,088,362
생산	300,698	657,205	404,687	101,751	257,452	1,886,436
수출	7,828	27,974	20,162	8,153	8,306	78,790

주: 조성 및 분양면적은 천 m², 고용은 명, 생산은 억원, 수출은 백만 달러 기준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 2004. 10.

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체 당 고용규모에 있어서 전체 공업단지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이 약 32명으로 전국 평균 31명과 비슷하지만 부산·경남의 50명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편이다.

끝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업체당 생산과 수출 규모가 각각 93.8억원, 3.03백만 달러로서 전국 평균 53.5억원과 2.2백만 달러에 비하여 높았으며,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업체당 생산과 수출이 전국의 그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기본 구상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98), 광양만·진주권 광역 개발계획('98), 남해안 관광벨트(2000),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1) 등 기존의 개발계획들을 보강하여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기지와 석유·제철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려는 데 있다(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03. 10).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은 물류기지화, 지역별 특화단지 조성 및 물류기지화 사업, 기타 배후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된다(표 10).

<표 10>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지구	1-2단계 ('10까지)	2단계 ('15년까지)	3단계 ('20년까지)
광양	· 권부두 3선석, 배후지47만평	· 권부두 5선석, 53만평	
울촌	· 여수공항 확충 · 전라선 복선 전철화	· 권부두 9선석 · 2산단(289만평) 개발	· 3산단 (150만평)
신덕	· 해룡산단 개발 (28만평)	· 복합물류 유통단지 (53만평)	· 주거·교육·의료 단지 (384만평)
화양, 하동	· 관광·생산기반 시설 (120만평)	· 레저·위락 130만평 · 생산기반 추가 70만평	· 레저·위락 80만평 · 물류해운 110만평

기획단에 의하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기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2조5,667억원을 비롯하여 지구개발비로 1단계에 2조 5,616억원, 2단계에 5조9,460억원 그리고 3단계에 2조6,731억원 등 총 13조7,474 억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조성된 부지매각 등 자체 조달 분 5조6,461억원을 제외 하면 순투자비는 8조1,013억원으로 되어 있다(표 1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총 파급효과는 약 10조2천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생산시설 파급효과가 약 8조6천억원, 물류시설 파급효과가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국토연구원, 사업단 추정: <표 12> 참

<표 11> 사업비 규모 및 조달 방안

(단위: 억원, %)

구 분	국고	지자체	민·외자	소계	자체 조달	총계
계	35,290 (43.5)	22,593 (27.9)	23,130 (28.6)	81,013 (100) (58.9)	56,461 (41.1)	137,474 (100)
기본 인프라	14,136 (55.1)	11,531 (44.9)	- (-)	25,667 (100)	- (-)	25,667
지구 개발비	21,154 (38.2)	11,062 (20.0)	23,130 (41.8)	55,346 (100)	56,461	111,807

자료: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3. 10. 24.

조)³⁾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106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해당 지역에 217천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본 인프라를 비롯하여 단지가 개발된 후, 국제업무빌딩, 주거, 상가, 레저시설 등 지상 구조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5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자 대 외자 비율을 38조원과 14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본 유치가 계획대로 수행될 경우, 외국인투자는 현재의 24억 달러에서 5배로 증가한 12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며, 생산유발효과가 105조원, 고용유발효과가 1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12>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원)

합 계	생 산 시 설			물 류 시 설			
	소 계	직 접 생산액	유 발 효 과	소 계	생산시설 효 과	임금유발 효 과	고용유발 효 과
102,541	85,541	28,000	57,541	17,000	6,500	1,300	9,200

자료: 전남 광양시 상공과(2003. 10).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2003. 10. 24).

3) 사업단, 국토연구원 및 전남도와 경상남도에서는 각종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파급효과를 80조원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파급효과에 대한 합산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음.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지가 아직 채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외자유치 규모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05. 5). 2005년 5월 현재, 3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유치한(MOU 기준) 총 외자 규모 189억 달러 중 인천구역이 93.3%(176억4천만 달러)를 점하고 있는 반면, 부산·김해구역과 광양만권구역은 각각 6.1%(11억6천만 달러), 0.5%(1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남해안 발전 방향

광주·전남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어 그동안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개발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지역총생산, 산업구조의 취약, 낮은 재정자립도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광주·전남지역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의 인구가 매년 3-4천명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남지역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매년 3-4만명이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거는 기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본 연구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해외자본의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인적자본의 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해외직접투자의 파급효과에 관한 문헌고찰, 해외 사례연구 및 광주·전남지역의 경제구조 분석을 통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같은 대단위, 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투자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특히 경제발전이나 환경보존 등과 같은 비금전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입안 당시와 비교할 때,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투자효과의 추정방법 등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동 사업과 같이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의 목표가 단순히 국내 기업이나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고용의 증대,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전체 주민의 복지 증진 등과 같이 종합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이어서야만 한다.

둘째, 광주·전남지역의 인적자원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유출, 특히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인구유출의 규모와 그 추이가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학생의 진학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진학 조건을 지역출신 학생으로 국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직접투자의 내용에 따라 인적자원의 수준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부문별, 기술(기능) 수준별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와 지역이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해외자본 유치에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과 연계해서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경제자유구역이 외자 등 주로 민간자본에 의하여 개발될 경우, 사업의 성공 여부는 투자규모와 유치되는 산업의 유형뿐만 아니라 유치하는 해당 지역의 기존 산업구조와 규모, 인구사회학적 구조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주민의 의식구조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당초 목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 폭을 넓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내외의 경우를 통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수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그와 같은 사업이 해당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건교부(1998), 『제4차 국토종합계획』.
 건교부(1998),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 국정홍보처(2003.12),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비전과 과제』,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5.
- 임현준(2004), “광주·전남지역의 성장잠재력 분석,”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 연구* 제36권 제2호: 127-148.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04. 6. 12),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전략』.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2005. 5. 26),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현황』.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2003. 10. 2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안)』.
- 전라남도 광양시(2003. 10),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보도자료』.
- 전라남도(2001),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 전라남도, 홈페이지.
- 통계청, 홈페이지(인구총조사, 인구이동통계, 총사업체실태조사, 지역내총생산).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2004. 10), 『전국산업단지현황』.
- Balasubramanyam, V. N. (1998), “The MAI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Discussion Paper EC 10/98*, Lancaster University.
- Corden, W. N. (1967), “Protection and Foreign Investment,” *Economic Journal*, Vol. 43, pp.209-232.
- Caves, R. E. (1971),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Vol. 38, pp.176-193.
- Dunning, J. (1993),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Global Economy*,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Kokko, A. (1994), “Technologies, Market Characteristics, and Spill-over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3, pp.279-293.
- Kokko, A. (1996), “Productivity Spill-overs from Competition between Local Firms and Foreign Affili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8, pp.517-530.
- Lall, S. (1980), “Vertical inter-firm linkages in LDC: An empirical stud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2, pp.203-226.
- MacDougall, G.D.A. (1960), “The Benefits and Costs Private Investment from Abroad: A Theoretical Approach,” *Economic Record*, Vol. 36, pp.13-35.
- Machin, S. (1996), *Learning from the Asian Tigers*, MacMillan Press, London.
- UNCTAD (2000). *The competitiveness challenge: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in developing countries*, UNCTAD, Geneva.
- Velde, te D.W. (2001 a), “Policies towa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Emerging Best-Practices and Outstanding Issues,” paper presented at FDI conference at ODI, March 2001, downloadable from http://www.odi.org.uk/iedg/FDI_Conference/FDIhome.html
- Velde, Te D. W. (2001), “Government Policies Toward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mplications for human capital formation and income inequality,” Prepared for FDI, Human Capital and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echnical Meeting 13-14 December 2001, Paris, OECD Development Center.

Van den Berg, H. (2001),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McGraw-Hill, Singapore.

Yussof, Ishak and Rahmah Ismail (2002), “Human Resources Competitiveness and Inflow of FDI,” *Asia-Pacific Development Journal*, Vol. 9 No. 1.

<Abstract>

**Gwangyangman FEZ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outhern Coastal Area: FDI Inflows
and Human Capital Formation**

Suknam Ko

Professor, Dept. of Econom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t's almost two years since the Gwangyangman FEZ project has been launched. A considerable amount of funds was planned to rely on FDI. So far, however, visible results are not shown yet.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case analyses, it was found that human capital form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ich affect regional economy and that FDI plays a key role in the process of human capital formation. From the analyses of Gwanju-Chonnam regional economy, the net outflows of human capital, especially for the age group of 15-29 were shown to be critical. Thus, in order to make the Gwangyangman FEZ project succeed, a detail and long-term plan for the demand and supply of human capital by sector and level is necessary.

Keywords: Gwangyangman, FEZ, human capital, FDI